

# 대법원장 “재판 거래, 수사는 협조”

〈김명수〉

### 대국민담화문 통해 “고발·수사의뢰 없다” 천명 “미공개 문건 포함 모든 인적·물적 자료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관련자들에게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는 하지 않되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등 현직 판사 13명은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 지난달 31일 관련자들의 형사 조치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지 보름만의 결본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선별되고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

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은 무릇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곽에 있어서도 공정해 보여야 하기에 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저의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에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13명의 현직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이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2

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은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과 무관한 사법연구를 유지하거나 오는 18일자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김 대법원장은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하여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라고 전했다.

또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도 지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자료의 영구보존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며 후속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법원 안팎

의 의견을 들은 후 형사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에 따라 지난 2주간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등 법원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왔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모든 행위가 외부가 아닌 사법부 스스로에 의해 일어난 현실에서 사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했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들에 대한 외부기관의 수사를 요청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며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번 말한 방안들이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며 “정책에 반대하거나 재판에 특정 성향을 나타낸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뉴시스

# “중진 ‘보수정치 실패’ 책임”

### 한국당 초선 의원들, 지선 패배 따라 “정계 은퇴해야”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15일 6·13 지방선거에서 당이 사상 최악의 참패 결과를 거둔 것과 관련해 “보수정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중진은 정계 은퇴하고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중진은 당 운영의 전면에 나서지 말고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순례·김성태(비례)·성일종·이은권·정중섭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버림을 받았다. 더 이상 기득권과 구태에 연연하며 살려고 한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살리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겸

허히 받들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진들의 결단을 요구하며 “우리의 이 걸음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중섭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의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오늘 아침 급한대로 모인 의원들끼리 입장을 우선 말씀드리다”며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 반성뿐 아니라 이에 부응하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우리 정치에서 보수 정치도 살아남기 힘들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계 은퇴 요구가 총선 불출마, 차기 당권 불출마 요구를 포함하며 “앞으로 의총 등에서 (당을 꾸려갈 방안 등)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바미당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원장에 김동철

### “차기 전당대회 2개월 안에 빨리 개최했으면”

바른미래당은 지난 15일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바른미래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김동철 원내대표가 맡는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저와 함께 동반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책임의 정치”라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입장에서는 핑계를 댈 게 아니라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비대위원장은 김 원내대표가 겸하기로 했다”며 “민약 향후 김 원내대표가 각 당 원내대표들과 원구성 협상을 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비대위원들과 얘기를 해서 원내대표 선거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희 지도부는 떠나면서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는 2개월 안에 가급적 빨리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나리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민주 지도부-광역당선자들, 민생활리기 다짐

### 당선자들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 국민 명령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을 축하하며 개혁과 혁신을 통한 민생활리기를 다짐했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지방정부와 민주당의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강병일·김영진·김경우·박병계·임종성·진선미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과 박원순, 이재명 등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나리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을 열었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한 명 한 명 언급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해줬다. 국민

을 위한 지방정부, 든든한 지방정부를 원하는 간절한 국민들의 염원이 당선자들에게 모여 민주당 승리가 됐다”며 “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자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 지방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집중하겠다. 중앙정부가 발맞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14분의 광역단체장 모두 민주당 원팀이다. 시공간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 지방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차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추 대표는 이어 “당선자들이 무거운 책임감과 더 낮은 자세로 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민주당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해나가겠다”고도 했다. 박원순·오거돈·박찬춘·이용섭·허태정·송철호·이춘희·이재명·최문순·이시종·양승조·송하진·김영록·김경수 등 14명의 당선자들은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다짐”도 선포했다.

이들은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며 ▲민생안정 최우선 ▲통합과 상생의 협치 실천 ▲소통 통한 국민주권주의 실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선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 안착에 노력 등을 약속했다.

당선자들은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 낮은 자세로 나리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최영규 도의원 당선인

### “익산 복지 변화 이끌 것”

전북도의원 선거 익산제4선거구에서 당선된 최영규 당선인은 “익산시와 전북의 복지와 환경 그리고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당선인은 “도내 모든 초중고생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무상우유급식을 추진하고 함께 익산과 도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미세먼지 등 고통받는 지역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장영희 기자



### 지선 이래 무소속 출마 고집

### 김용균 익산시의원 당선인

지방선거가 도입된 이래 첫 선거부터 이번 6.13 지방선거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출마한 출마자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익산시의원 나선거구(중앙·평화·인화·마동)에서 당선된 김용균 당선인(88·무소속)이 화제의 주인공이다.

2013년 보궐선거까지 합하면 무려 9번이나 시의원에 출마표를



던진 셈이다. 성적표는 9전 5승. 더욱 놀라운 진기록은 9번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 한 것. 한때 민주당에서 러브콜을 했지만 무소속을 고집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무소속 출마해 5번이나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김 당선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공모에 선정돼 250억 원이 투입되는 중앙동 일원 옛 도심 활성화 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용역이 진행 중인 200여만 평의 남부권역 택지개발사업에 온 힘을 기울일 생각”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제5회 한옥마을 품바 명인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www.ekr.or.kr](http://www.ekr.or.kr)

지란스 녹색성장  
녹색사업을 농어촌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녹색 부가치를 창출합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영농 및 생활환경개선을 촉진 합니다.

세만금종합개발사업  
세만금지역을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육성,  
관광인프라와 소득기반을 구축합니다.

농어촌이 향하는 길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 대한민국 농어촌의 희망을 경영합니다

농어촌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꾸는 우리 농어촌.  
어제의 농어촌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오늘의 농어촌이 내일의 우리나라를 만듭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일?